



축산정책방향

-노경상 축산국장

본고는 지난 8월 29일 축산신문 주최로 개최된 「한만수 농림부 장관초청 축산인 연찬회」에서 정찬일 건대 농축대학원장과 농림부 축산국장이 특별강연과 축산정책 설명자료로 주제 발표한 내용을 재편집하여 게재한다. -편집자주

이 주요정책 추진 계획

1.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품질 고급화 대책

가. 추진실적

(성과)

○개방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농가불안심리 해소 기여

• 일본의 화우산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,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한우산업 미래에 대한 희망과 농가의 개방불안심리 해소

○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인상, 다산장려금제도 현실화 등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고

급화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사육두수가 증가세로 반전

• 한육우 사육두수: ('97.12) 2,735천두

→ (2001.3) 1,476 → (2001.6) 1,507

• 1등급출현율: (2000)24.8%

→ (2001.6)30.8, 거세우: 52%

• 암소 도축율: (2000.12) 55.1%

→ (2001.8.22)45.7

(문제점)

○큰소와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가격불안 우려

• 큰소(8,23): 수소 3,406천원, 암소 3,827천원

• 송아지: 수소 1,890천원, 암소 1,863천원

• 쇠고기 가격: 13,068원/kg

○소규모 부업농가 위주의 생산체제로 규모



화·대형화되어 가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품질경쟁력이 미흡

- 일본의 경우 1등급 출현율이 76% 수준이나 우리의 경우 31%

- 10두미만 농가 229천호(88.1%), 50두 이상 농가 3,9천호(1.5%)

○개방초기 시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산장려금, 거세장려금 각종 보조지원의 확대로 농가의 자율적 시장적응 노력이 약화될 우려

나. 향후 추진계획

○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지속 추진

- 소규모 부업농가 육성 등 종합대책의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

○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

- 사료 및 사양관리 통일,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, 공동구매 및 출하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지향적 생산구조 정비(2003년까지 한우산업추진제 130개소 육성)

- 한우혈통등록과 인공수정료(두당 2만원)지원, 도체정보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암소 개량 추진

○개별농가보다 한우 사업 추진체를 구성한 생산자단체를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단위 자유발전체계 구축

- 다산장려금, 거세장려금, 등록비 등

○우량송아지의 공급 확대를 통한 송아지 가격 안정화

- 인공수정 확대 및 수태율 향상

- 번식기간 단축 및 임신우 사양관리 철저

- 송아지 폐사율 감축

- 젖소 암소를 활용한 한우송아지 생산

- 번식우 입식자금 탄력적 운용

- 암소 도축 억제

- 농가 교육 및 기술지도 강화

○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업평가 강화와 함께 한우농가 홍보·교육 실시

2. 양돈산업 안정대책

가. 추진실적

(성과)

○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추진기반 마련

- 생산자단체, 학계, 연구기관, 소비자단체 등

으로 구성된 “양돈수급안정위원회”구성(3.27), 수급안정자금배정(2001,500억원), 수급안정위원회 개최(6.14) 등 실시

○ 선호부위와 비선호부위 수급균형을 위한 내수확대 및 수출의 적극적 추진으로 돈가회복

• 필리핀 등 동남아 수출을 적극 추진 상반기 목표초가(2001년 목표 5,000톤, 6월까지 수출 실적: 5,243톤)

• 산지가격이 작년 말 생산비 이하에서 금년상반기 평균 20만원 수준을 유지하여 양돈농가 소득안정에 기여

- (2000.12) 152천원/100kg → (2001.6) 205 → (2001.8) 186

(문제점)

○ 구제역 청정화 이후 지속적인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품질고급화 노력 미흡

• PSE돈육비율: 우리나라 45%, 덴마크 등 선진국 4~5%

○ 최근 돈가 상승에 따른 입식증가로 하반기 이후 수급불안 우려

• 사육두수 추세: ('00년)8,214천두 → (2001.3) 8,193 → (2001.6) 8,396

• 산지가격은 7월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0

월에 최저가까지 하락한 후 11월에 다소 회복 추세가 예상되나 금년말, 내년초 가격불안 우려

○ 부위별 수급불균형 지속

나. 향후 추진계획

○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강구

• 양돈 관련 전문기관 등의 수급 및 가격전망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사전에 농가에 홍보

○ 비선호 부위의 지속적 소비확대, 수출촉진 등 수요기반확충

• 비선호 부위의 요리개발, 양념돼지고기 등 가공품개발 추진

• 현행 군납제도를 개선(전 부위1두 → 등심, 전후지)하여 비선호 부위의 소진과 선호부위 수대체 촉진

• 생산자단체 중심의 TV광고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비활성화 추진

•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·필리핀 러시아 등 수출시장 적극 개척

○ 산지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시 민간육가공업체를 통한 수매 실시 미 공급감축 추진

• 과잉생산 출하된 비육돈을 시장격리 시켜



가격안정유도

- 지자체 및 양돈협회를 통한 자율적 모돈감축 추진

-자율적 모돈감축이 어려울 경우 방역기준의 적용을 통한 도태유도

○청정화 이후 수출 재개 대비 지속적 품질 고급화 추진

- 규격돈 생산촉진자금 지원, PSE물떼지 감소, 육질등급 기준개선 등 추진

3. 양계산업안정대책

가. 추진실적

(성과)

○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 기반 마련

- 생산자단체·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란계 “양계수급안정 위원회”를 구성, 수급안정자금 배정(500억원)

○「양계산업발전종합대책」을 수립, 닭고기 경쟁력 강화 비전 제시

- 2010년까지 4천억원을 닭고기 수출시장개선, 유통개선, 질병방역 등에 집중 투자하여 닭

고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

- 닭고기 등급판정기준을 마련 육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

- 양계산물 가격안정

-육계: ('00.12) 874원/kg

→ (2001.8.23) 1,336 (생산비 959)

-계란: ('00.12) 793원/10개

→ (2001.8.23) 996 (생산비 668)

(문제점)

○계란의 공정한 가격형성 기능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

- 상인중심의 유통으로 거래단위별 품질기준이 없어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음

- 계란등급판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축산법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필요

○닭의 질병관리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흡

- 닭의 법정전염병(뉴캐슬병)에 대한 살처분 보상규정이 없어 대부분 농가에서 질병신고 기피

나. 향후 추진계획

○생산자 자율의 「양계수급안정위원회」기능 활성화로 수급안정 유지

- 가격등락 등 수급별 가격동향을 모니터링, 필요시 산란계 분과위 및 육계분과위 등을 즉시 가동

- 닭고기, 계란의 규격화 및 품질차별화를 위한 등급제도 보완

- 닭고기등급제는 200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포장 및 규격화 촉진

- 계란은 법적근거 마련전에 등급판정시험사업(10월)실시 및 경매제 도입을 통한 품질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기능 구축

- 닭고기의 수출전략 품목화 적극추진

- 일본 현지에 닭고기 홍보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

- 일본식육신문광고 4회 실시

-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확대

- (현행) 포장재비 30원/kg

- (확대) 포장재비, 운송비 198원/kg

- 닭고기, 계란 소비 홍보 확대

-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닭고기 구별방법 및 국내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 (8~9월)

- 뉴케슬병 등 닭 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기준 마련방안 검토

-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별도고시 개정

4. 집유일원화 및 낙농수급안정

가. 추진실적

(성과)

- 낙농진흥회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기반조성 및 효율적 정책으로 수급안정 도모

- 집유일원화사업 권역내 원유 수급조절을 위하여 수매 및 차액보전 실시 등으로 분유제고 등이 감소

- ※ 국내 분유제고 동향

- '00년: (1월) 6.0천톤 → (3월) 9.5

- (5월) 12.0 → (6월) 11.8

- '01년: (1월) 12.6천톤 → (3월) 11.2

- (5월) 8.1 → (6월) 6.7

- 집유일원화에 대한 인식변화

- 지역별 설명회 및 차별화된 지원 등으로 일부지역 및 유업체 종사자들의 집유일원화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

(문제점)

- 집유일원화사업 참여결정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참여율 저조



•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율: 참여농가 57%, 생산량 기준 62%(금년도 목표 80%)

○농가들의 반대로 원유가격상정체계 제도 개선 추진 미흡

나. 향후 추진계획

○집유일원화사업 참여율 목표 달성: 80%이상

• 낙우회별, 유업체별 설명회 및 홍보자료 제공 등

• 유가공시설 개선자금, 유통개선자금(냉각기 시료 채취기, 유량계) 등 정책자금 조기집행 유도 및 사후관리

• 충남지역중심 조합의 집유일원화사업 조기 참여 유도(목우촌 인수와 관련)

• 지난해말 집유조합이 2개소인 도에 대하여 경영평가 실시

-강원도(강운낙협, 춘천축협), 전북도(동진강낙협, 지리산낙협), 전남(광전우유, 동부낙협), 경남(부산우유, 경남낙협)

-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도별 집유조합 1개소 선정추진

○집유일원화사업 정착시까지 수급조절사업

추진

• 집유일원화 권역내 잉여 원유에 대한 수급 조절사업 시행

-수급조절사업비 지원: 422억원(잉여물량 전량)

-차액보전: 국산분유 사용실적에 따라 차액 지원(300원수준/kg)

-용도별 가격차등지원(5개업체): 국산원유사용 유가공품 생산지원(수입경쟁가격 확보: 310원수준/kg)

○집유 및 원유대금관련 제도개선 조기 마무리

• 원유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유대금 이외의 보조성 경비지급 금지

• 용도별 차등가격제 확대 추진

• 유대산정체계개선 제도의 보완

○유가공품 생산기반 조기구축

• 치즈 등 유가공품 생산시설 개·보수 및 증설자금 지원(154억원)

5.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

가. 추진실적

(성과)

- 냉장·부분육 유통을 위한 LPC 운영활성화 여건조성 노력
 -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을 제정, 냉장·부분육 유통활성화 기반조성
-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축산물 육성, 육류유통 투명성 추진
 -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Cyber 전시관 개설, 브랜드 육성자금 지원, 한우·젓소고기의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을 통한 부정유통단속의 실효성 확보 노력

(문제점)

- LPC 활성화를 위한 도축장 정비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LPC 처리 및 운영활성화 지연
- 구조적인 유통여건 불비로 유통환경변화 대응 미흡
 - 영세, 노후 도축장의 난립으로 전국 평균가동율이 저조(40%)
 - 소매점 시설 규모화, 현대화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매점이 난립하여 냉장·부분육 유통체계 확립 애로
- 소비자 인식부족, 지육 유통관행으로 브랜

드육 유통의 활성화 미흡

- 유통환경 변화, 국제적 추세에 상응하지 못한 유통제도로 통상마찰 우려
 - 개방에 따른 구분판매제 폐지,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금지, 소매단계 유통개선지원 대상한정, 쇠고기 원산지 표시기준 등

나. 향후 추진계획

- 건설중인 LPC 연내 완공추진
 - 원주 LPC: 10월 중 완공가동, 홍성 LPC: 12월 중 완공·내년초 가동
 - ※군위 LPC: 7.24 개장('99년 12월 완공)
- 「2001년 우리축산물 브랜드전」의 성공적 개최('01.11.23~11.26, 코엑스 대서양관)
 - 요리강습 및 요리대회, 고급육 품평회, 세미나 등 행사준비 철저
 -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소비자단체 회원의 참석편의 제공 및 홍보강화 추진
- 부분육상장경매 시연회 개최로 부분육 유통기반 조성
 -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부분육 상장경매 시연회 개최('01.10월중)
- 전문지, 리후렛 등 사전홍보, 관련기관의 긴



밀한 협조강구 등

- 부분육의 전자상거래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

토 추진

- 식육의 투명성 확보방안의 지속적 추진

- 축산물(돼지고기 등)의 표준바코드 도입

적극 추진

- 부정유통축산물 단속강화

-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유전자감별법 기술개발 완료 및 현장활용계획 마련

○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제도 개선

선

-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강화, 소매단계 육류 투명성 보안을 위한 「식육 거래기록유지제도」 입법 추진

- 원산지 허위표시시 벌칙 강화(1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→3년이하 징역, 3천만원이하 벌금)

- 쇠고기 원산지 표시기준 개정추진(대외무역관리규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)

6. 축산물 위생강화

가. 추진실적

(성과)

-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조 기정착 홍보·교육

- HACCP 적용 대상품목에 포장육을 추가하여 축산물 위생·안정성 강화

- 전국 139개 도축장 일제 교차점검실시로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

- 영업정지 2개소, 과태료 28개소, 시설개보수 명령 127개소 등

- 1차 행정처분 미이행 작업장이 2차 점검시 지적받는 경우 영업정지대상임

- 원유검사 공영화제도 정착(96.1%)으로 원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불신해소

(문제점)

- 도축장 HACCP 적용 부진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 미흡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애로

- 도축장 시설수준 및 영업자 의지부족으로 HACCP 추진 실적 저조

- (금년 대상 37개소 중 4개소 적용)

- HACCP 미적용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처벌기준 미흡(과태료 30만원)

- 가축사육시 농장단계 위생관리 미흡으로 항생물질 등 동물용 의약품 오·남용 및 비위생적인 가축사양관리 등으로 원료육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미흡

-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이외(타조, 오소리 등)에 동물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 미흡

나. 향후 추진계획

- 축산물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정착

- '01.7월 HACCP 적용 대상 37개 도축장 HACCP 제도 정착

- 축산물가공품 자율적 HACCP적용확대: 4개 품목류 추가

- 분쇄가공육, 양념육, 저지방 우유류, 아이스크림류

- HACCP에 대한 교육·홍보 추진 강화

-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 및 축산물 가공, 판매단계 위생관리 강화

- 저온냉장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축산물보관

- 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마련

-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 2차 전국 도축장 일제 교차점검 실시

-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: 11월 완료

- 도축업 영업자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준수 규정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

-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기준(SSOP)준수 규정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

-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 이외의 사육동물인 타조에 대해 농림부령(의뢰검사규칙)을 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 추가

- 축산물의 범주에 “식용란”추가로 위생·안전성 확보

7. 가축방역강화

가. 추진실적

(성과)

- 강도 높은 구제역특별대책 추진으로 금년도 재발을 방지하고 축산농가, 생산자단체 등의 방역의식 배양에 기여

- 구제역 유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국경검



역 및 범정부 차원의 구제역특별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국내방역 추진

○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위한 예방접종 중단여건 조성

• 전농가 예방약 100% 지원 및 소규모 사육 농가 예방접종 지원, 농장혈청검사 및 미접종 농가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방역관리

※구제역 청정화 시기 등과 연계, 예방접종 중단시기를 조정 (당초 2001.3 → 변경 2001.10)

○광우병 발생우려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로 국내유입우려 불식

(문제점)

○구제역특별대책기간동안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, 특별대책 종료 후 농가의 방역 의식이 다소 소홀

• 예방접종 가축의 잔류(66천두)로 인한 대 일돈육 수출재개 협상 애로

○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시 농가가 재발생을 우려, 접종 중단 의지 약화

• 예방접종 중지 이후 재발될 경우 방어 능력이 없어 확산속도가 빠르고 피해규모도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

• 접종 중단 후 출하, 매매 돼지의 이동통제 시스템,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사용제한 등 재발생시 피해보상 등 정부시책에 대한 농가 및 단체의 불만 제기

나. 향후 추진계획

<구제역 방역대책>

○청정화 목표달성을 위한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의 지속 실시

• “전국 일제소독의 날” 운영(10월말까지 월 2회 실시, 11~1월은 월1회 실시)

• 지역별 구제역 방역 순회교육 실시

(8.28~9.4)

• 예방접종 가축의 이동제한 등 사후관리 이행실태 보완

-농가별, 축종별 예방접종잔류두수(7월말기준 66천두) 처리방안에 대해 생산자 단체와 협의

('01.9월 중)

•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도태에 대비한 “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, 장려금 지급 요령”개정(농림부 고시, '01.9)

○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위원회에 구제역 청정국 인증신청 준비

• 구제역방역 실무대책협의회 개최(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)

• OIE에 청정국 인증을 위한 구제역 방역추진상황 보고서 제출(8.27)

- 지난해 8월 마지막 예방접종 후 1년동안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청정국 인증 신청요건 구비

- OIE 구제역위원회(2001.9)에서 청정국 인증 심의(내년 5월 OIE 총회에서 최종 결정)

<돼지콜레라 방역대책>

○ '01.9월말까지 100% 예방접종 실시

• 예방접종 실시 확인을 위한 농장채혈 검사 및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(300만원 이하) 처분 지속

- 소규모 사육농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조기 완료

○ 예방접종 중단을 대비한 위험도 평가 시험 사업 실시('01.6~9.20)

• 시험사업을 통한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접종중단에 따른 농가의 불만과 불안요인을 해소

○ 예방접종 중단 이후 사후 관리 방안 수립

추진('01.9월 중)

• 예방약 수급, 혈청검사, 이동제한 등 방역 관리, 예방접종 중단 후 재발생 농가 지원방안 마련

○ 관련제도 개선

• “돼지 콜레라 방역실시요령(농림부 고시)” 개정('01.9): 예방접종 중단 이후 관리 방안

<광우병 대책>

○ BSE 관련 품목 국내 유입 방지 철저, HS code 품목분류 및 개별법에 따른 수입관리방안 수립점검

○ BSE 관련 국내 조치 사항을 OIE 등에 제출하여 국제 신뢰도 구축

○ 광우병 위험분석 및 위해평가를 위한 Task Force 구성

• 반추동물에 동물성사료, 남은음식물사료 급여실태 조사평가

○ 국민 불안감을 감안, BSE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경우 대농가 및 소비자 홍보 추진을 최소화하여 축산환경 개선